

국내 방역체계 이대로 좋은가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구제역이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이후 55일이 넘도록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몰처분된 가축의 수도 1월 21일 현재 230만두가 넘었다.

이로써 통계청의 2010년 12월 1일 가축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소는 4.1%가 돼지는 21.9%가 매몰처분됐다.

이 같은 매몰처분의 수가 백신접종으로 인해 감소 추세 이기는 하지만 향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시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은 축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 됐다. 충남 천안에 이어 전북 익산, 구례·함평·나주·영암 등 전남 지역을 휩쓸고 이어 경기 안성, 이천, 파주까지 확산됐다. 1월 21일 현재 4개 시·도 11개 시·군에 걸쳐 총 30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매몰된 가금류의 수도 1월 20일까지 380만수에 달한다. 특히 AI의 경우 겨울철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볼 때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축산업의 위기로 인식하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진정기미를 보일 지는 미지수다. 질병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는 설에 가족들의 귀향까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다. 이처럼 가축질병이 확산된 데에는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료업체와 컨설



팅 수의사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구제역이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급기야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까지 음성이라는 확신을 내린 것이다. 이 사이 농장을 방문한 가축분뇨시설 차량이 방문하면서 전국 확산의 빌미가 된 것이다. 방역당국이 방역대를 부랴부랴 설치하고 이동통제를 실시했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난 후라는 것이다. 결국 바이러스의 차단이 아닌 바이러스 확산을 뒤쫓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는 과거 2008년 AI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북 김제의 AI 발생지역의 가금산물이 방역통제 초소를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동통제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적이 있다.

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잠시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 빈틈을 헤집고 급속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원화 된 구조로는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단위의 방역청 신설과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무수히 제기됐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축매몰과 보상금에만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농가와 관련 업계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자금이 필요하다. 방역에 필요한 인원과 조직, 장비를 단순 수치로 평가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을 맞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축방역 조직을 일원화하고 그에 걸맞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동물검역소, 동물위생연구소 등 3개 중앙기관에만 844명이 방

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검사는 검역소 식품감시과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방역 및 도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가축보건위생소와 식육위생검사소에는 약 4,8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조직의 인원은 물론 지방 방역인력도 우리나라의 약 8.6배로 많아 평시에 비상 방역체계 대비 및 농가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아무리 국경검역과 방역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농가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악성가축질병을 막아낼 수 없다. 인접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높아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장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방역의식이 요구된다. 가축질병 예방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최고의 방어자이고 책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